

전남 인구 180만명 붐과...수도권 집중에 '백약이 무효'

인구정책·정주환경 개선 등 대책에도 청년들 일자리 찾아 떠나
2차 공공기관 이전·지방 도시권 강화 등 균형발전 속도 높여야

18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213만명(2000년)이던 전남 인구가 10년 만인 2010년(191만 8000여명) 200만명 선이 깨졌고, 이후 6년 만(2017년·189만 6000명)에 190만명 선이 깨진 뒤 올해 180만명(3월 말 기준) 선이 붐괴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5184만 9861명·12월 말 기준)의 50% (2592만 5799명)를 돌파한 뒤, 올해 50.8% (2603만 3235명·3월 말 기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 등 정부의 소극적 추진 의지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은 물론 대기업, 대학 등의 전남으로의 이전까지 전남을 비롯한 소멸 위기의 지방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올해만 57개 사업에 1739억76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인구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179만 8435명으로 2월(180만 352명)보다 1917명 감소했다. 2017년 189만 6000명에서 190만명 선이 처음 무너진 이래 6년 여 만에 180만명이 붐괴된 것이다. 1년 전(181만 3872명)에 견줘 1만 5437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보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신안이 유일하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0년만 213만명에 달했지만 10년 만인 2010년 191만 8000여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6년 만인 지난 2017년 189만 6000명으로 190만명 선도 붐괴됐다.

청년 인구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60만 8960명이던 청년(18~45세) 인구는 1년 만인 2019년 59만820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3월 기준 51만 3443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불과 5년 여만에 9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났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9년에만 100개의 인구 정책을 내놓았고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귀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지원 등으로 꾸려진 인구정책관실의 확대를 통한 인구청년인민국도 신선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해 정부의 출입국·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올해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1만원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시키고 있는 공허한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는 4·10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보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언급해 온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 2의 행정북부도시 추진 등 지방 대도시권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시킬 적극적인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남도,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계적 지원금 제공 대책만 내놓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을 변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프랑스·일본 사례 등에서 비취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대란 어떻게 되나..."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담화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2000명 재확인 속 "의료계와 논의 가능"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의협 "숫자 후퇴 없어 실망"

윤석열 대통령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공을 넘겼다.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는 데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2000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 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으로 팍 막힌 현 국면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 온 '2000명 증원 규모'

를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결국 '통일된 안'을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의료계는 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간중간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집단행동의 이유를 수임과 연관 지었고, 대한의사회에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정부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 온 '2000명 증원 안'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계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타이거즈 전맹대 - KT·삼성 잡고 1위 탈환 ▶18면

굿모닝 예향 - 남도유람 광양 로컬 브랜드 ▶19면

팔도 건축기행 - 경남문화예술회관 ▶22면

2024년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한 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올해도 돌봄도시 광주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돌봄콜 1660-2642 어디든 찾아가는

지난 한 해 도움받은 서비스 이용자 수

8,891 명

우울감 9.6점 ↓ 삶의 만족도 9.2점 ↑ 사회적 안정감 16.6점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모형 개선방안 연구 결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란?

우선적으로 기존돌봄을 연계하고

둘째는 광주+돌봄으로 배우고

위급할땐 긴급돌봄이 출동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발생

일상생활지원 | 식사지원 | 동행지원 | 건강지원 | 주거편의 | 안전지원 | 일시보호

일시재가 # 방문목욕 # 영양실제 # 영양음식 # 병원동행 # 관공서 # 방문맞춤운동 # 방역·병중 # 시 안부확인 # ICT 활용 # 케어안심주력 # 안전체크 # 안전생활원경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문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돌봄콜(1660-2642)

이용절차 신청 ▶ 현장방문 및 평가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